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번호 1	노인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분 야*	보건복지
<p><input type="checkbox"/>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li> </ul> <p><input type="checkbox"/> 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을 하고 있음. 직장에 있을 때는 최장 시간 일하고 퇴직하고도 12년을 더 일하지만 한국 어르신은 가난함</li> <li>○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연금(월 60만원)이 최저 생활비(월 124만3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862만명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이지만, 중위 수급액은 38만2000원에 불과함</li> <l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한국은 2020년 기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 비율)이 40.4%로 회원국 가운데 1위임. 한국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연금제도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근로기간에 받는 임금에 대한 연금액의 비율)이 낮아서임</li> <li>○ 연금이 적고 가난하다 보니 정년이 지나고서도 일을 해야만 함.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사상 최대치에 이룸. 노인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는 일을 하고 있거나, 직장을 찾고 있다는 의미임. 이 비율은 2000년 29.6%에 그쳤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2020년 35%를 넘어서더니 2023년에는 40% 가까이로 늘었음</li> <li>○ 22대 국회에서 입법화</li> <li>○ 2025년부터 실행</li> </ul> <p><input type="checkbox"/>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이후 계속</li> </ul> <p><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예산 구조조정 후 복지 예산 확대</li> </ul>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번호 2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원 지급 (총 1억2000만원)	분 야*	보건복지
<input type="checkbox"/>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원(총 1억2000만원) 지급</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짐. 1981년 통계를 작성한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숫자임.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고, 지난 2/4분기에는 0.70명까지 떨어짐</li> <li>○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일지도 모름.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그렇고, 청년층의 부양 인구가 늘어나 연금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음</li> <li>○ 2022년 경제성장론의 대가인 데이비드 웨일(David Weil) 미 브라운대 교수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에 ‘역풍(Headwind)’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함</li> <li>○ 저출산 예산의 정의와 범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역대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280조원이란 예산을 쏟아부음. 왜 효과가 없었을까? 우리공화당은 현재의 저출산 정책이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출산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고 있음</li> <li>○ 최근 현금을 많이 주는 지역에서 출산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정책의 현실성을 높여주는 것임</li> <li>○ 22대 국회에서 입법화</li> <li>○ 2025년부터 실행, 입법화 즉시 실행</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이후 계속</li> </ul>			
<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예산 및 지출구조 개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제고에 따른 세수 증대분을 활용</li> </ul>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번호 3	청년 세대용 '반값아파트' 100만호 건립	분	야* 청년
<input type="checkbox"/>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아파트' 100만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3포 세대'라는 말이 처음 생긴 지 벌써 10년을 훌쩍 넘김. 그 사이 포기하는 것은 늘어나 이제는 '9포 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음</li> <li>○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직장에서 받는 낮은 임금으로는 자산 형성이 매우 어려움.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생활물가상승률은 청년을 빈곤으로 내몰고 있음. 특히 주거비 상승률은 두드러지게 높아져, 최근 '주거 빈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주할 주택에 관한 관심은 커지고 있음</li> <li>○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2022년 6.4%로 전체의 2.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자가보유율은 14%에 불과함. 2019년 18.9%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를 비롯한 집값이 그 기간 동안 급등했기 때문임. 한편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 가구'는 2022년 기준 43만에 이르고 있음</li> <li>○ '한강의 기적' 기간 기성세대는 부를 축적할 기회가 많았지만, 청년세대는 그러한 자본이득을 획득할 '운'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음</li> <li>○ 22대 국회에서 입법화</li> <li>○ 2025년부터 실행</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이후 계속</li> </ul> <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용지용 그린벨트 해제, 낭비되고 있는 SOC 예산 절약</li> </ul>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번호 4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4+3메가 시티 추진,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실현	분	야* 지방자치
<input type="checkbox"/> 목 표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룩함  <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 ○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많고, 지방은 인구가 너무 적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수도권에서는 주택 부족, 집값 폭등, 전·월세 부족,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은 기업의 역외 이전, 상권의 붕괴, 일자리 부족, 열악한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등으로 인해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음 ○ 이제 지방에서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방법,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국세와 지방세를 6:4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자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 ○ 민간 차원에서도 지방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지방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금감면과 각종 규제의 면제와 같은 지원대책을 실시함. 지방의 대학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지방의 의료기관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함

○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 법률개정 및 제도정비 ⇒ 법률과 제도의 시행

이행기간

○ 2024년 ~ 2034년

재원조달방안

○ 국세 대 지방세 비중 조정: 70% 대 30%에서 80% 대 20%로 전환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번호 5	교육제도 혁신	분 야*	교육
<input type="checkbox"/>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정보사회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융합과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양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 국민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국민에게 국가의 의무인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임</li> <li>○ [6-3-3-4]의 4단계로 구성된 현재의 학제는 산업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의 단계를 줄이면서 각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압축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li> <li>○ 현재의 4단계 16년의 학제를 3단계 14년의 학제 [5-5-4]로 개편함.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1년 단축하고,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을 현재의 만 7세에서 만6세로 낮춤. 아동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충분한 유아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취학연령을 낮추고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동들의 교육 성과를 높이는데 더 적합함.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의 초등교육을 대학의 고등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중등교육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의 중등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체계성과 통합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li> <li>○ 새로운 학제 하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학업을 완료하여 만20세가 되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으며,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만24세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음. 학교를 떠나서도 사회에서 충분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을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학교교육에 묶어둘 필요가 없음</li> <li>○ 학제 개편을 통해 학업을 마친 사람들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li> </ul>			

하여 청년 시기에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늘려 고령화 사회에서의 경제활동 인구 부족에 대비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 공청회 ⇒ 교육관련법의 개정 ⇒ 학제개편의 시행

○ 학제개편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취학전 교육기간의 전문성 확대와 지원을 통해 학제 개편이 전체 교육 생태계에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함. 저출산고령화사회 탈피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일·가정 양립정책 확립에 있어 지속적인 대한민국 교육기반 육성과정에서 모든 연령대의 교육기관이 조화로운 협력을 할 수 있음

이행기간

○ 2024년~2034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번호 6	선거제도 개혁 및 사이버테러 적극대응	분 야*	정치
<p data-bbox="164 418 304 454">□ 목 표</p> <ul data-bbox="199 472 1278 508"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199 472 1278 508">○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li> </ul> <p data-bbox="164 584 352 620">□ 이행방법</p> <ul data-bbox="164 638 1450 2000"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164 638 1450 844">○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함.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li> <li data-bbox="164 862 1450 1615">○ 현재의 선거제도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과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계수)제임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누구나 선거 당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표방식 및 투표함 보관·이송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사전투표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고 개표소에서 전자개표(정확하게 말하면 전자계수)를 실시하는 것 역시 참관인들이 투표지의 유효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표지가 각 후보자에게 올바르게 집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개표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개표의 신속성이 아니라 개표와 집계의 정확성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표소 현장에서 참관인들이 입회하는 가운데 수개표가 이루어지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함.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지만 이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음</li> <li data-bbox="164 1632 1450 2000">○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선관위가 선거여론조사·언론보도·선거운동·투표과정·개표방식 등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과 관련하여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편파적인 선거관리 혹은 거대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자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할 처벌을 가하도록 해야 함.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li> </ul>			



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임

○ 검찰과 법원이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소와 소송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도 민주주의 파괴라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사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됨

○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외국인의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선동 등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주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이버테러는 있을 수 없는 일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테러를 막을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및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를 해소해야 함.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비정상적인 사이버활동에 대해서도 대처해나가야 함

○ 선거관련 법령의 개정 ⇒ 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 책임 강화 ⇒ 선거제도 개혁조치의 시행

이행기간

○ 2024년 ~ 2028년

재원조달방안

○ 국비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번호 7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미동맹의 기술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	분야*	국방
[첨단정보과학군 건설]			
<input type="checkbox"/>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li> <li>○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8개 군단·39개 사단' 체제를 2025년 '6개 군단·3개 사단 체제'로 바꾸는 식으로, 전방 2개 군단, 6개 사단 해체</li> <li>○ 주적 표현 금지</li> <li>○ 지난 문재인 정권은 전쟁억지력 차원에서 만들어진 DMZ GP철거, 철원 지뢰 제거, 탱크 방어벽 철거, 한강 수로 공동조사, 한강 하류 철조망 철거, 20km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안보 환경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음</li> <li>○ 드론을 활용한 군사작전 등 군현대화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신기술에 따른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 사이버테러 등을 방어하기 위한 군기술 혁신을 도입해야 함</li> <li>○ F35, 싸드 도입 등 신무기 획득 사업 계속 진행</li> <li>○ 기계화 사단 육성</li> <li>○ 드론 등 신무기 활용</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 계속</li> </ul>			
<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li> </ul>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input type="checkbox"/>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동맹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서 업그레이드하기</li> </ul>			

○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과의 연합안보에 적극 참여

이행방법

○ 국제경제체제 편입으로 부강해진 중국은 국진민퇴(國進民退), 일대일로(一帶一路), 제1 제2 도련선(島鍊線) 설정 등 사회주의적 제국주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으며 미국이 인도양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이에 맞섬에 따라 국제질서가 미-중간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

○ 바다는 교역과 개방과 번영을 가져온 장소로서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고, 걸프지역 페르시아만에서 석유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대양해군을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에 필요함.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이에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번영을 이룩해야 함

○ 중반미노선 반대: 일대일로 참여 · 북한을 경유한 러시아 송유관부설 및 철도연결 계획 등 반대

○ 인도양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참여 결의안 및 한미일 삼각 안보 경제 협력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기술동맹으로서 업그레이드를 하여 신냉전 체제에서의 안보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함

이행기간

○ 즉시, 계속

재원조달방안

○ 비예산사업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번호 8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분 야*	보건복지
<input type="checkbox"/>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한번 놓쳤음</li> <li>○ 윤석열 정부는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개혁의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연금혜택을 늘리면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li> <li>○ 현재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구조로서는 연금고갈 시기가 너무 일찍 다가오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것이 긴요함</li> <li>○ 대략 3가지 방안이 존재할 수 있음. 더 내고 덜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더 내고 더 받기가 그 3가지 방안임</li> <li>○ 연금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서는 앞의 2가지 방안이 적합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금을 내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움</li> <li>○ 우리공화당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음. 현재의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5%로 올리는 방안임</li> <li>○ 하지만, 이와 같은 개혁을 하더라도 연금의 고갈시기는 약 10여년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음. 따라서 연금의 수익률을 대략 3%p 정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이 정도로 수익률을 높이면 약 12년 정도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음</li> <li>○ 이렇게 확보된 약 20년 내에 한국 경제는 다음의 3가지 추가 과제를 시행해야 지속가능성이 있음. 첫째, 대규모의 이민 유입, 둘째, 저출산 극복, 셋째, 잠재성장률을 4.5%까지 제고하는 일임</li> </ul> <input type="checkbox"/>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 목표</li> <li>○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높이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대 국회에서 입법화</li> <li>○ 2025년부터 실행</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이후 계속</li> </ul> <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율이 조정되면 자동적으로 국가와 기업의 부담액 변화</li> </ul>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번호 9	K-방산·우주항공, 뷰티·의료관광 등 10대 산업 육성	분	야* 산업자원
<input type="checkbox"/>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p씩 낮아지고 있다는 실증 연구가 나왔음.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저출산·고령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임</li> <li>○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공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 육성 정책이 없으면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호에 그칠 수 있음</li> <li>○ 윤석열 정부는 2022년 4월 인수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키울 6대 산업으로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 대응,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제시함</li> <li>○ 윤석열 정부의 6대 산업도 인공지능을 제외하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고, 특히 탄소중립 대응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목표’에 가까움. 에너지는 범위가 너무 커 세부적으로 무슨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음</li> <li>○ 우리공화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10개를 제시함. 선정 변수는 ‘미래 성장성’, ‘고용 창출력’, 그리고 ‘IT(AI)와의 융합 잠재력’임.</li> <li>○ 5대 제조업은 AI칩·파운드리, SMR·수소, K-방산·우주항공, 바이오, 로봇이며, 5대 서비스업은 AI(인공지능), 뷰티·의료관광, 웹툰, K-Pop(드라마), 그리고 K-Game임</li> </ul>			
<input type="checkbox"/>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대 국회 내에 정부와 협의하여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li> <li>○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집중하여 지원</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대 국회에서 입법화</li> <li>○ 2025년부터 실행</li> </ul>			
<input type="checkbox"/> 이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이후 계속</li> </ul>			
<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산업 육성 정책 자금의 효율성 개선 등</li> </ul>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우리공화당		
정책번호 10	민노총·전교조 해체를 통한 청년세대의 기회균등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분 야*	노동, 교육
<input type="checkbox"/> 목 표 ○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			
<input type="checkbox"/> 이행방법 1. 민노총 해체 ○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임. 하지만 민노총은 사업장의 범위를 넘어 전국적 단위에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정치단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미 노동조합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였음. 특히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민노총의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 민노총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고용 세습을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시대착오적 악습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폭압적인 갑질과 같은 악행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악습과 악행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여 경제를 침체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고 있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발전과 시장경제의 성숙한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발전과 산업평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의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민노총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함			
2. 전교조 해체 ○ 전교조는 교사나 교수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교원노조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음.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진정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좌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전교조의 활동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위협하는 것임			

-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함
- 특별법의 제정 및 소송의 제기 ⇒ 특별법과 판결의 집행

이행기간

- 2024년 ~ 2028년

재원조달방안

- 비예산